

# “공익제보자, 매장 당해선 안돼... 절망하는 공무원 없기를”

## 신재민 前 기재부사무관

“공무원, 같은 상황 처하지 않길 행정조직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재민 전 사무관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 더는 없기를 바란다”

“공익 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법적보호 받고 싶다”

“차영환 당시 靑비서관, (적자국채 추가발행 않기로 한) 보도자료 취소 요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면서 “KT&G 사

건을 보고 닳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닳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일하며 회의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동영상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저는 공익 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로서) 법적 보호는 받고 싶다”면서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 공익 제보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서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닌 시스템이고, 그 속에 일하는 한명 한명의 모습이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먹은 기간 동안 불행함에 대해 알리고,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전달하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공직에서) 나오고 나서도 일을 못했다. 공직에서 세금을 받으며 일한 데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1월 14일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 취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한 달 전에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 등에서 누구 한 명은 고통 받는다. 납득 못할 의사결정을 거쳐서 취소한 것만으로도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신 전 사무관을 이날 오후 5시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 전 사무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논란과 관련해서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직접 국·과장에 전화해서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확정)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23일 오후 배포됐다. /연합뉴스

## 도시재생 영세상인 ‘상가 내몰림’ 막는다

### 국토부 ‘상생협력 상가’ 상반기 착수 ‘강화 임대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력 표준안을 만든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 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생협력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 사항도 명시했다.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상생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력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력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영세상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력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csh9101@



직원과 신년인사 하는 도종환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진청, ‘축진참돈’ 등 우리돼지 4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은 2일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우리나라 품종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네 품종을 소개했다.

먼저 ‘축진참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고유의 재래돼지를 지키기 위해 1988년부터 20년에 걸친 복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문헌 속 재래돼지처럼 털은 검고 머리는 길고 뽕족하며, 이마에는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코가 길고 곧으며, 귀는 앞쪽을 향한 모습이다. 축진참돈은 ‘축산업을 진흥하는 진정한 돼지’라는 뜻으로 품종 등록을 마쳤다.

다음으로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은 1998년 미국과 캐나다의 씨돼지를 들여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발한 품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비 씨돼지의 국산화를 이끄는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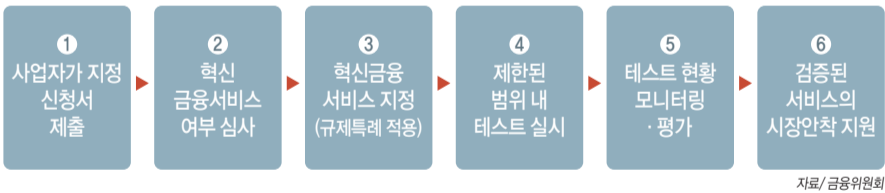
전국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마다 100마리 가량 보급하고 있다.

이어 육질 뛰어난 흑돼지 ‘우리흑돈’은 고기 맛이 좋은 축진참돈과 성장이 뛰어난 축진듀록을 교배했다. 재래돼지보다 잘 자라며, 고기 색이 붉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흑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난축참돈’은 제주흑돼지와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해 맛과 성장 등 경제형질도 높은 품종으로, 2005년부터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특히, 최신 유전체 기법을 이용해 제주흑돼지의 맛 관련 형질과 털의 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집했다. 맛에 영향을 주는 근내지방도(겉지방)는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고, 소비자의 맛 평가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절차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핀테크기업·금융회사 등 대상

혁신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에 일정기간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의 심사를 진행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를 위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 처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월 중 핀테크 예

산안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은 40억원으로, 혁신사업자에 선정되면 정부가 테스트베드 비용 75%를 대고 나머지를 자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확대, 지급결제분야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활성화 제약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대출과 관련하여 앞서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정부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 해수부, 121억원 투입 제1차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해양수산정보 종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2019~2021)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정보의 가치 창출 데이터 허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가치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참여 및 협업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민간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발굴을 촉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해양수산정보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1억 원을 투입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해부수, 오늘부터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

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